

'20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

제4호 안건 (보고)

2019년 고용영향평가 결과 보고

2020. 3. 6.



고용노동부

순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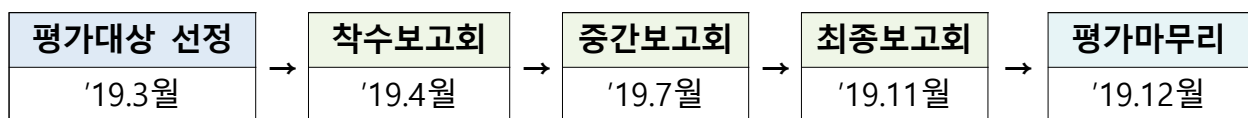
I. 추진 경과	1
II. 평가 결과	2
III. 평가 결과 활용	5
〈붙임 1〉 고용영향평가 개요	6
〈붙임 2〉 '19년 고용영향평가 과제 리스트	7

I. 추진 경과

□ 평가 일정

- ('19.3월) 고용정책심의회에서 28개 평가과제 선정
 - * 산업부, 농식품부, 과기부, 국토부 등 19개 부처 관련 과제
- ('19.4~12월) 약 9개월간 평가 실시
- ('19.12월) 평가 결과(정책제언 등) 부처의견 수렴 및 마무리

<고용영향평가 흐름도>



□ 추진사항

- 고용영향평가 품질제고를 위해 「평가 표준매뉴얼」 적용

<평가 표준매뉴얼 주요내용>

- (평가내용) 일자리창출 경로, 고용의 양·질(임금, 근로시간 등)에 미치는 영향
고용의 양·질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 (평가방법) 산업전문가 등과 공동연구진을 구성하고,
공인통계 분석, 시나리오 설정·분석, 설문조사 및 FGI(심층면접) 등 실시
- (평가절차) 최소 3회 이상 관계부처 및 현장(산업계·노동계 등) 의견수렴

- ① 해당 산업·정책에 대한 보다 정확한 분석 및 이해를 위해 산업전문가 등과 공동연구진을 구성하여 평가 실시
- ② 총 3회에 걸친 평가보고회(부처·전문가 참여)를 통해 품질 관리
 - ▲ 착수 보고회(4월): 연구 범위 및 방법(활용자료 등) 논의
 - ▲ 중간 보고회(7월): 고용의 양·질에 미치는 효과 도출 방법 논의
 - ▲ 최종 보고회(10월): 고용효과 평가결과 보고 및 정책개선 내용 발표·논의
- ③ 실효성 있는 정책개선 방안 모색을 위해 부처 참여 및 전문가 의견수렴 실시
 - * 세부 평가범위를 부처와 논의하여 결정하고 연구진 - 부처 간 수시 의견 교류
 - * 설문조사·심층면접(FGI) 등을 통해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노·사 등) 의견 수렴

II. 평가 결과

□ 평가대상

- 혁신성장, 산업활성화, 공정경제 및 노동조건 개선 등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28개 과제 평가

* (분야별 과제 수) 혁신성장 7개, 산업활성화 7개, 공정경제 및 노동조건 개선 6개, 지역활성화 4개, 규제개선 등 4개

□ 분야별 주요 평가결과

혁신성장 : 스마트팜 활성화 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 (배경) '22년까지 7,000ha의 시설원예 스마트팜 면적을 확대하고 축산 스마트팜 농가의 수를 5,570호까지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스마트팜 확산 방안」 발표(18.4월)

*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 청년 농업인 육성, 스마트팜 보급 확대 등

- (고용효과) '28년까지 농업과 관련 산업에서 79,000여개 일자리 창출 예상

<스마트팜 확대 정책에 따른 시나리오별 고용효과>

시나리오		구분	고용효과	계
1	'22년까지 스마트팜 시설원예면적을 7,000ha로 확대	농가	- 자가·상용 일자리: 19,421개	37,069개
		산업	- 스마트팜 사업체: 16,383개 - 스마트팜 컨설턴트: 1,265개	
2	'23~'28년 스마트팜 시설원예면적을 10,000ha로 확대	농가	- 자가·상용 일자리: 19,924개	41,936개
		산업	- 스마트팜 사업체: 19,862개 - 스마트팜 컨설턴트: 2,150개	

- (정책제언) 현재 정부 주도로 수집되는 스마트팜 데이터는 호환성이 낮고 산발적으로 존재하며 민간으로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음

⇒ 민간과 정부가 협업하여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인프라 구축(일본의 WAGRI 시스템 참조)

< 기타 혁신성장 분야 평가과제 >

- ▲ 데이터경제 활성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 ▲ 금융 분야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의 고용효과
- ▲ 소비행태 변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 ▲ 로봇산업 활성화의 고용효과
- ▲ 일터혁신의 고용효과
- ▲ 스마트산단의 고용효과

산업활성화 : 자동차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일자리창출 방안

- (배경) 국내 자동차 생산량은 '11년 이래 지속 감소, 특히 자동차 부품산업은 국내 완성차업체에의 의존성이 높아 완성차 시장의 침체는 전반적인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약화 초래

* 2017년에는 2011년(465.7만대) 대비 9.8% 감소한 411.5만대 기록

- (고용효과) 정책패키지 시행 시 자동차부품기업의 매출성장률 2.2%p, 고용성장률 1.8%p 정책효과 추정

* (일자리 수) 정책 시행 후 3년간 매년 약 5,544명 고용증가 전망

** (정책패키지) 5개 전략(공정거래, 해외진출 지원 등) 16개 세부정책과제(중견기업 수평적 협력 및 역할 강화, 수출지향형 기술개발 지원 등)로 구성

- (정책제언) 세계시장 및 국내 완성차 성장 둔화 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중견/중소부품업체들이 수평적 협업방식을 통해 기술경쟁력 배양 및 해외시장 진출 등 다변화 전략 필요

⇒ 중견기업과 다수 중소기업이 공동의 해외시장진출을 위한 파트너십을 결성하여 유기적으로 협업

< 기타 산업활성화 분야 평가과제 >

- ▲ 자동차산업 신성장 분야의 고용효과
- ▲ 뿌리산업 다각화 지원정책의 고용효과
- ▲ 관광복지 및 생활문화 확산의 고용효과
- ▲ 한류확산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 ▲ 사회서비스 활성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 ▲ 소셜벤처 활성화의 고용효과

공정경제 및 노동조건 개선 : 배달앱 확산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 (배경) 국내 음식 배달업 시장은 온라인 배달앱(app)의 확장으로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가 빠른 속도로 증가

- (고용효과) 앱 이용률 및 시장규모 증가 시 배달대행 배달원 증가, 직접고용 배달원 감소(단, 총 고용은 순증으로 추정)

<배달원 현황 및 향후 변화량 추정치>

구분	배달원 수 현황 및 변화량 추정치(명)		
	현재	배달대행업 이용률 1%p 증가 시	배달대행업 이용률 1%p 증가 + 시장규모 1% 증가 시
배달대행이용	83,394	+8,674	+9,595
직접고용	47,292	△ 2,897	△ 2,453
합계	130,686	+5,777	+7,142

- (정책제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특례에 따른 배달원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적용) 홍보 강화 및
배달대행업체의 산업 안전·보건 조치 의무 강화

< 기타 공정경제 및 노동조건 개선 분야 평가과제 >

- ▲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의 고용효과 ▲ 생계형 적합업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 ▲ 제조업 근로시간 단축의 고용효과 ▲ 소상공인 역량강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 ▲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의 고용효과

지역활성화 : 지역산업 및 고용위기지역 지원대책의 고용효과

- (배경) 지역 주력산업 침체에 따른 지역경제 어려움 가중, 이에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및 지원대책 실시
- (고용효과) 재정투입에 따른 거시적 고용유발효과는 높을 것으로 추정
되나, 대조군 비교를 통해 분석한 미시적 고용효과는 불분명하게 나타남
- * 다만 비제조업부문에서는 통영·고성을 제외한 4개 지역에서 고용 증가효과 발생
- (정책제언) 지역의 고용 및 산업 위기를 지속적·선제적으로 파악·
대응할 수 있는 체계 구축 필요

⇒ 지역주도 위기지역 대응시스템 구축

- * (중앙정부) 부처 단위의 지원협력체계 구축
- * (지역단위)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중앙정부와의 협력체계 구축

< 기타 지역활성화 분야 평가과제 >

- ▲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고용효과 ▲ 혁신도시 조성 및 활성화의 고용효과
- ▲ 어촌뉴딜 조성의 고용효과

규제개선 등 : 비통신 IoT사업 진입규제 완화의 고용효과

- (배경) IoT 산업 발전으로 인해 인력 수요가 증가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IoT 산업 진입이 용이해짐
 - * 기간통신사업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별정통신사업은 등록제 규정 삭제로 진입 규제 완화
- (고용효과) 진입규제 완화와 함께 개별기업 지원, IoT 산업 생태계 조성지원 정책 시행 시, 비통신 IoT기업 202개 조사결과 기업당 고용증가량은 11.7명, 고용증가율은 0.063% 예상
- (정책제언) 정부, 관련 협회 등의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전문인력양성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

⇒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확대 및 홍보

< 기타 규제개선 분야 등 평가과제 >

- ▲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업역규제 개선의 고용효과 ▲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의 고용효과
- ▲ 창업벤처기업 공공조달시장 진입장벽 완화의 고용효과

III . 평가 결과 활용

- 고용영향평가 결과 발표회 등을 통해 공감대 확산('19.12월) 및 금년 중 우수과제를 선별하여 월간 고용영향평가 브리프 발간·배포 예정
- 평가결과보고서는 고용영향평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20.3월)
 - * 평가센터 홈페이지 : www.kli.re.kr/eia
 - ** 연구자, 연구내용, 연구방법, 정책제언, 정책제언 부처 이행상황 등 주요 내용은 DB로 구축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활용할 수 있게 함
- 평가결과에 따른 정책제언 이행현황 모니터링 ('20.6월, '21년 하)

□ 평가목적

-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의 정책이나 법, 제도 등의 수립·추진으로 인해 예상되는 고용 효과를 분석하여
- 해당 정책 등이 본래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일자리의 양과 질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 개선권고 제시

□ 근거법령 및 도입경과

- ('09년) 고용영향평가 법적 근거 마련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
- ('10년) 정책 고용영향평가 실시
 - * '10년 시범평가(7개)를 거쳐 '11년부터 본격 실시('11 ~ '19년, 230개)
- ('13년) 평가 전담기구로 고용영향평가센터(노동연) 설치

□ 평가방법 및 내용

- ① 일자리 창출 경로 및 ② 고용의 양·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③ 고용의 양·질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실시

□ 세부내용

분류	내 용
대상	고용의 양·질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계획·정책·제도·규제 * 매년 고용정책 심의회에서 선정
내용	정책 등의 고용효과를 분석하고 고용의 양·질 개선을 위한 대안 발굴
활용	평가결과에 따라 각 부처에 정책제언 및 이행 여부 점검
절차	대상 선정(고용정책심의회) → 평가 실시(노동연 고용영향평가센터 주관) → 평가결과 협의(고용부-부처) → 개선권고(고용부) → 개선현황 점검(고용부)

순서	분야	과제명
1	혁신성장	스마트팜 활성화 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2		데이터경제 활성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3		로봇산업 활성화의 고용효과
4		금융 분야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의 고용효과
5		일터혁신의 고용효과
6		소비행태 변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7		스마트산단의 고용효과
8	산업활성화	자동차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일자리창출 방안
9		자동차산업 신성장 분야의 고용효과
10		뿌리산업 다각화 지원정책의 고용효과
11		관광복지 및 생활문화 확산의 고용효과
12		한류확산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13		사회서비스 활성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14		소셜벤처 활성화의 고용효과
15	공정경제 및 노동조건 개선	배달앱 확산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16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의 고용효과
17		생계형 적합업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18		제조업 근로시간 단축의 고용효과
19		소상공인 역량강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20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의 고용효과
21	지역활성화	지역산업 및 고용위기지역 지원대책의 고용효과
22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고용효과
23		혁신도시 조성 및 활성화의 고용효과
24		어촌뉴딜 조성의 고용효과
25	규제개선 등	비통신 IoT사업 진입규제 완화의 고용효과
26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업역규제 개선의 고용효과
27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의 고용효과
28		창업벤처기업 공공조달시장 진입장벽 완화의 고용효과